



“꼭 대박나세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사흘 앞둔 12일 전주시 전주한일고등학교에서 350여 명의 1, 2학년 후배들이 수험생 선배들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대형 카드섹션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100세 시대, 노인 일자리로 행복을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 노후 소득보장 심포지엄
시간제 일자리 제공·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 제언

전북지역 노인일자리를 진단하고, 국가적 정책과제로 떠오른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보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시와 전주시노인취업지원센터,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는 12일 전주 시청 강당에서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과 노인일자리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전북지역 노인 일자리와 노후 소득보장'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지역 노인 일자리 수요와 공급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종섭 전북연구원 박사에 따르면, 전북은 빈곤인구가 많고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 사회적 수요가 매우 높은데 비해 노인 고용률은 47.6%로 전국 평균(59.0%)보다 10%p 이상 낮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84.8%(17만 3000명)에 이르고 질적 수준도 낮다.

이 박사는 “향후 일할 의향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5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들에게 공공부문의 지역적

합형 일자리 발굴과 함께 4시간 이하의 시간제 일자리를 개발해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창업보다는 취업중심 일자리 확대 △노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농촌지역 60대 전방 노인세대를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로 흡수하는 전략 △지방자치단체의 실버농장 무료 분양으로 빈곤노인 소득창출 등 4가지 일자리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노인은 기대수명 연장으로 노후가 길어지고 산업화·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부양 역할 축소로 공적 노후소득보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국민은 65.4%에 그치고, 62.1%가 공적연금(기초연금+국민연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빈곤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공적연금 수급자는 86%

에 이르지만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기초연금 25만원+ 2017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 평균액 51만원)은 충분하지 못한 상태”라며 “기초연금 인상과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각종 크레딧)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박사는 “국민연금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초연금액이 지속적으로 상향되어 기초·국민연금과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국민연금의 수치 불균형과 저출산고령화로 장기재정 불안정이 가중돼 후세대 부담을 고려한 보험료를 상향 등 적정부담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에 이어 노인일자리 창출과 공적연금 등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토론도 이어졌다.

먼저, 강혁구 JT전주방송 정책심의실장은 “노인일자리에는 노인의 빈곤 문제는 물론, 고독과 무위급 해소를 위한 사회적 관계 형성과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노인복지의 핵심”이라며 “심각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형 일자리

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소중한 가치이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과 일자리 개수 채우기, 중앙 주도형 사업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제언했다.

김원용 전북일보 논설위원은 “노후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나라여야 미래 세대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노인은 미래의 나이기 때문”이라며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 은퇴 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보장이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줄 때 여러 쟁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쉽게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은 은퇴한 노인들이 짧은 시절부터 쌓아온 경력이나 전문성을 전혀 살릴 수 없는, 저임금의 단순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며 “전문직 은퇴 노인이 그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청년 근로자들의 멘토가 되어 주고, 본인도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와 함께 일하며 자신의 일자리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취업연계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143 익스트림타워 개발 본격화

자광, 지난달 전북도 소유 공유지 사전협의를 완료 후 전주시에 지구단위계획안 접수

전주143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추진단이 개발지역내 전북도 소유의 공유지에 대한 사전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해 달라는 1만8,000여명 주민의견 연명서명이 전주시(생태도시국)에 제출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주)자광은 국토교통부의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구역 내에 포함되어있는 전북도 소유의 공유지(2필지, 6,228㎡)에 대해 사전협의를 지난 10월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주143 익스트림타워 조감도

이는, 자광이 지난 10월 22일 전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사전협의를 완료한 12일에 전주시(체육종합시설추진단)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접수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한 전북도의 회신에 따르면, 공유지 사용목적 등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법률 제49조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도록 추진할 것을 사업주체에 요구했다.

이에대한 전북도의 회신에 따르면, 공유지 사용목적 등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법률 제49조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도록 추진할 것을 사업주체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광은 전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따라 지난 29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고 14일간 주민의견공청을 실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주민의견제출 대표(송동호 님)는 “전주시의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토지도 100% 확보하고, 동시착공-동시준공 등 개발계획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큼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에 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며, 18,000여명 주민의견 연명서명을 받아 전주시(생태도시국)에 제출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청원 20만 명 시 정책으로 채택하는데 전주시 65만 인구 대비 0.0004%는 2만6,000여 명으로 추정, 따라서, 전주시도 1만 8,000여명의 주민의견을 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자광은 강조했다.

이번 제출된 주민의견은 전주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 중 역대 최대 주민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며, 전주시 행정에 전주시민들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주목 받고 있다. /송효철 기자

‘최규호 전 교육감 도피 도왔나?’

전주지검,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

전주지검은 12일 최규성(68)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최 사장은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뒤 8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 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최 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이날 전남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최 사장의 직무실과 자택 등을 수색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김재환 전 전북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유 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3억원을 받아 행간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해 지난 8일 검거됐다. /뉴스

전주시, 남북정상회담 기념 평화통일포럼 개최

남북교류 전망 논의... 시, 15일부터 학교 학급별 통일교육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평화통일을 준비하기로 했다.

전주시와 (사)전북겨레하나, 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정치외교학과는 12일 전북대 인문사회관에서 '남북정상회담기념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민·관·학이 함께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함께 마련한 자리로, '평화 새로운미래! 한반도 통일정세와 남북교류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4.27 정상회담과 남북관계 그리고 평화교육'을 주제로 김창희 전북대학교 교수는 “평화와 화해의 협력 분위기를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관·학이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교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안문석 전북대학교 교수는 “북한 왜 핵을 개발했나?”를 주제로 핵개발을 통한 북한의 국가발전 전략과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해 설명했으며, 이선우 교수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향후 발

전모델 전망'을 주제로 북한의 체제전환 경로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제시했다.

또한, 조정현 전주 YMCA 사무총장은 이날 시민평화대표단 일원으로 유엔 사무국에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한국시민사회 5만명 서명고 한반도 평화선언문 전달, 유엔 NGO단체들과 연대 등 유엔총회 참여 활동기를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분위기와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방용승 전북겨레하나 공동대표도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회의 참여를 비롯한 생생한 평양 방문 경험을 전달했으며, 전북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중인 박영서 학생은 “아시안게임 원로리아 응원단 활동”을 통한 남북교류 경험담을 소개함으로써 청중들의 공감을 이끌었다.

한편, 시는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는 흥산초등학교 등 전주지역 4개 학교 27개 학급을 방문해 학급별 통일교육인 '찾아가는 통일교육 1탄 학교편'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25일부터는 '찾아가는 통일교육 2탄 주민센터편'을 진행할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전주한옥마을 주민·상인·예술인들이 '한뭉'

시, 문화비빔행사 성료

전주한옥마을 주민과 상인, 문화예술인, 전주시민이 비빔밥과 문화공연을 매개로 하나가 되는 화합행사가 열렸다.

전주시는 지난 10일 전주한옥마을 남천교 청연루에서 전주한옥마을 주민과 상인 및 자생단체, 전주시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비빔밥을 나눠 먹고, 문화행사를 즐기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문화비빔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한옥마을 주민과 상인, 여행객들이 함께 비빔밥 퍼포먼스를 선보였으며 만들어진 비빔밥을 나눠먹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2부 순서로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문화예술인 10여개 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문화공연무대를 만들었다.



지난 10일 전주한옥마을 남천교 청연루에서 전주한옥마을 주민과 상인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문화비빔행사가 열렸다.

문화공연은 통기타연주와 락, 락, 락, 색소폰, 시낭송, 살풀이 등 한옥마을의 정취와 어울리는 다양한 공연 외에도, 한옥마을 비빔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한옥마을의 대 화합을 표현하는 라이트 드로잉쇼 등도 선보였다.

문화공연은 통기타연주와 락, 락, 락, 색소폰, 시낭송, 살풀이 등 한옥마을의 정취와 어울리는 다양한 공연 외에도, 한옥마을 비빔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한옥마을의 대 화합을 표현하는 라이트 드로잉쇼 등도 선보였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가정위탁아동 등과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관람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이번 10월 관내 가정위탁아동 등 저소득가정아동 30여명과 함께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뮤지컬 신흥무관학교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연 관람은 평소 문화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 가정아동들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해 기획했다.

완산구 가족청소년과 최성식 과장은 “이번 문화체험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해 가정위탁아동 등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의 기회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산구 가족청소년과에서는 지난 8월 저소득가정아동 60여명과 함께 서울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졌다. /송효철 기자

덕유산국립공원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 운영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 사무소(소장 허영범)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11월부터 2019년 3월 10일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으로 정하고 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립공원 자원보호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는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기(굴무, 밧 등) 설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생물보호단 등 가용인력에 대해 특별 단속반을 구성하여 순찰을 강화하고, 유관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밧·굴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밧·굴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는 동법에 의거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주=전문선 기자